

독 일

# 2023년 안정화 프로그램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2023. 6.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독일 연방 정부가 발표(2023.4.26.)한  
2023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공동연구원** | 한혜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b>1</b>	<b>경제 전망</b>	<b>1</b>
<b>2</b>	<b>재정 전망</b>	<b>3</b>
<b>3</b>	<b>주요 재정정책</b>	<b>6</b>
	가. 재정정책 방향 .....	6
	나. 수입 및 지출 관련 재정정책 .....	7
	다. EU의 국가별 재정정책 권고 이행 .....	10
<b>4</b>	<b>장기 재정 지속가능성</b>	<b>11</b>

---

**요 약** SUMMARY

- 독일 정부는 2023년 4월 26일에 2023년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보고서<sup>1)</sup>를 발표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에 유로지역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경제·재정전망, 중기재정목표(MTO), 주요 재정정책 설명 등을 포함한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경제 전망) 독일의 실질 GDP는 2023년에 0.2%, 2024년에 1.8% 증가할 전망
  - 독일의 2023년 물가상승률은 6.0%로 예상되고 노동시장 호조세도 지속될 전망
- (재정 전망)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에 4.25%로 상승 후,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의 종료로 반영해 2024년에는 1.75%로 하락할 전망
  -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3.25%에서 2026년에 0.75%로 점차 개선되어 독일의 중기재정목표(MTO)인 0.5%에 근접할 전망
  -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3년에 67.75%로 상승 후, 2026년까지 6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정책 전략을 추진
  - (위기 기간의 단기 안정화) 위기 상황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추가 물가상승 압력을 방지하도록 적시에 한시적이고 표적화된 정책을 설계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경제·재정정책) 총공급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급 측면 정책이 필요하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
  - (재정의 회복력과 안정성 보장) 과도하게 확장적인 재정기조는 지양하고 위기 이후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며,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관리

1)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3*, 20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3.pdf?\\_\\_blob=publicationFile&v=6](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3.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3.5.2.; 독일 연방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3-04/German\\_SP\\_2023\\_en.pdf](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3-04/German_SP_2023_en.pdf), 검색일자: 2023.5.2.

# 1 | 경제 전망

## » (단기) 독일 정부는 ‘2023 연간 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3)’ 전망에서 2023년 독일의 실질 GDP가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DP)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적응,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평균 GDP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짐
  - 2023년 초반에는 고물가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제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 그러나 2023년 1분기 이후 물가상승 둔화,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독일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될 전망
- (물가) ‘2023 연간 경제보고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6.0%<sup>2)</sup>로 예상
  - 가스·전기·난방 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정부 대책과 전년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저효과는 물가상승률을 낮출 가능성
- (노동시장) 독일 노동시장의 호조세는 계속될 전망
  - 2023년 취업자 수는 16만명 늘어날 전망이나 높은 노동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분야의 고숙련 인력 부족이 다시 심화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난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편입에 따른 통계적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독일의 실업자 수는 감소할 전망

## » (중기) 독일 연방정부는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0.9%로 가정

- 견조한 노동시장 추세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임
-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완만한 성장세는 주로 잠재 생산 추세(연평균 증가율 0.8%)에 기인
  - 중기 추세에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하는 반면 노동의 성장 기여도(중기에 마이너스)는 감소
  - 숙련 이민자 증가, 여성, 노인, 실업자, 이민자의 노동 참여 확대 외에도 생산성 향상이 독일 중기 성장 전망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

2) 개정 전 소비자 물가 통계 기준

〈 표 1 〉 독일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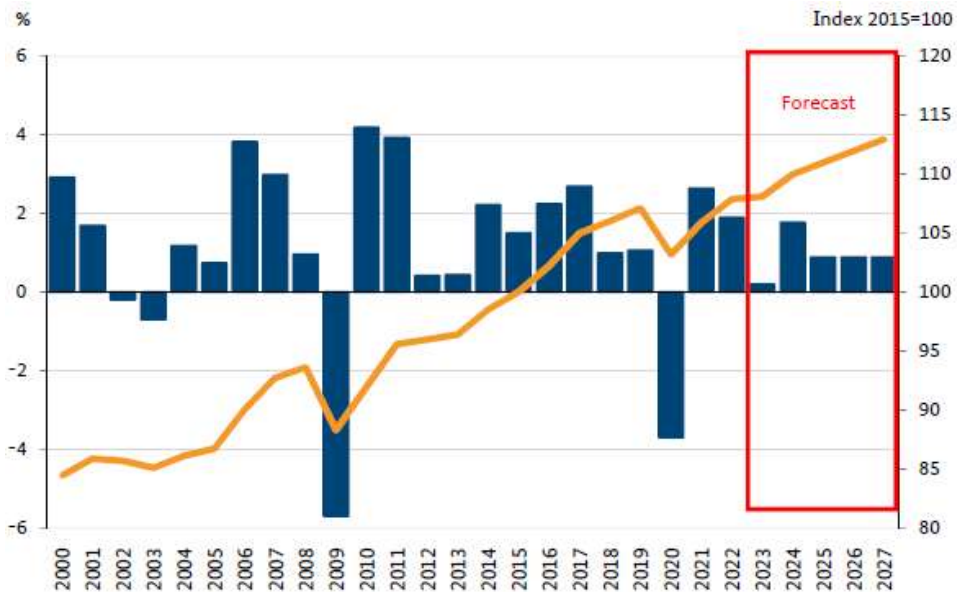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 GDP 성장률	1.8	0.2	1.8	0.9	0.9	0.9
민간소비	4.3	-0.2	1.6	0.9	0.9	0.9
정부소비	1.2	-0.4	0.8	0.7	0.7	0.7
총고정자본형성	0.4	0.0	2.8	1.4	1.4	1.4
수출	2.9	2.2	3.3	3.2	3.2	3.2
수입	6.0	1.6	3.2	3.4	3.4	3.4
GDP 디플레이터	5.5	5.9	2.7	2.0	2.0	2.0
취업자수	1.3	0.3	0.2	-0.2	-0.2	-0.2
실업률(% , ILO 기준)	2.8	2.8	2.7	3.1	3.3	3.5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p.53, Table 9; p.54, Table 10; p.54, Table 11.

〈 그림 1 〉 독일의 실질GDP 추이

(단위: %, 2015년=100 기준 지수)



주: 막대 그래프(좌축)는 전년 대비 증감률(%), 꺾은선 그래프(우축)는 GDP 연쇄지수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p.10, Figure 1.

## 2 | 재정 전망3)

### » (수입) GDP 대비 수입 비율은 2023년에 45.75%로 전년(47.1%) 대비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늘어날 전망

- 주로 인플레이션 보상법, 한시적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2022년도 세법(Jahressteuergesetz 2022)의 조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GDP 대비 세입 전망치가 전년보다 하락

### » (지출)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23년에 약 50%로 전년(49.7%)에 이어 다시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할 전망

- 이러한 추세에는 주로 ‘에너지 관련 경제안정화기금’의 보조금 증감<sup>4)</sup>이 반영
  - 동 기금의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에 GDP 대비 약 3%를 지출할 전망이고 이 중 2.5%p는 보조금에 배정
  - 다만 동 기금의 실제 지출 규모는 불확실성이 높아<sup>5)</sup> 이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변동 가능
-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정책 종료로 현물 사회보장급여, 경상이전 지출은 2023년에 전년 대비 감소, 자본 이전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또한 투자 보조금은 증가(예: 기후전환기금의 영향)하는 반면 에너지 회사 국유화에 계획되었던 자본 지원 감소로 기타 자본 이전은 감소
- 총 정부투자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연평균 약 5.75% 증가할 전망
- 2022년에 GDP의 0.7%였던 이자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6년에 1.25%로 향후 크게 증가할 전망
- 2023년 ‘EU 평가 기준 재정지출<sup>6)</sup>’의 증가율은 ‘에너지 관련 경제안정화기금’ 지출의 영향과 수입을 감소시키는 재량적 조치로 인해 8% 증가할 전망
  - 하지만 이후에는 지출증가율이 2024년 약 0%, 2025년 1%, 2026년 2.5%로 명목 증기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3) 이번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전망은 연방 정부의 2023년 연간 경제보고서(2023.1.25.), 세수추계(2022.10.25. 기준) 업데이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함

4) GDP 대비 보조금 규모 : 1.9%(2022년) → 3.75%(2023년) → 1.75%(2024년) → 1.5%(2025년)

5) 에너지 가격 상한제의 실제 비용은 최종 소비자 에너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기금 계획안의 당초 예상 가격보다 최종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경우 실제 지출액은 감소

6) 이자지출, 노동시장의 경기변동 영향, 평균 지출 수준 대비 투자 지출의 변동, EU 프로그램 조달 지출, 수입 관련 재량적 조치의 영향 등을 조정한 지출을 의미. 동 지출의 증가율을 지출 기준치(중장기 잠재성장률)와 비교하여 평가

- » (일반정부 재정적자)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6%로 전년(3.7%)보다 개선되어 EU 기준인 3%를 하회했으나, 2023년에는 4.25%로 악화될 전망

  - 실제 지출 규모의 불확실성이 있는 ‘에너지 관련 경제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에 GDP 대비 1.25%로 예상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임시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반영해 2024년에 1.75%로 하락해 EU 기준을 하회하고 2026년까지 0.75%로 점차 감소할 전망
- » (구조적 재정적자)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3.25%에서 2026년에 0.75%로 점차 개선되어 독일의 중기재정목표(MTO)인 0.5%에 근접해 갈 전망

  - ‘에너지 관련 경제안정화기금’을 제외한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0.75%로 예상
- »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에 66.3%에서 2023년에 67.75%로 상승 후, 2026년까지 6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2019년 말에 59.6%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스트리히트 기준(60%)을 하회
  - 2023년 부채 비율의 증가는 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에 기인

〈 표 2 〉 독일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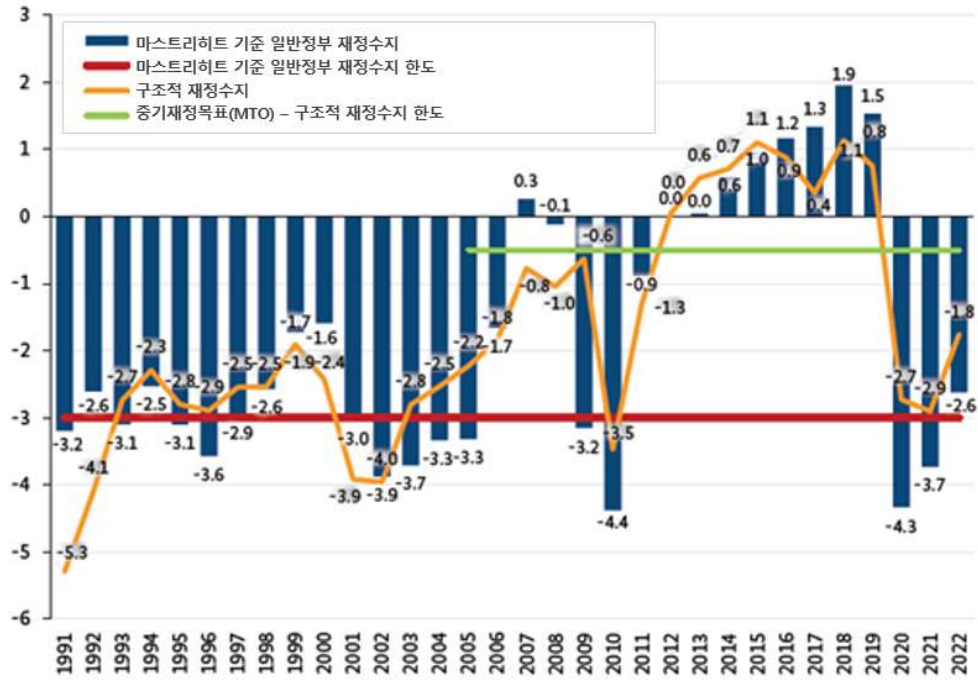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반정부 총수입	47.1	45.75	46.00	46.50	46.75
일반정부 총지출	49.7	50.00	47.75	47.25	47.25
일반정부 재정수지	-2.6	-4.25	-1.75	-0.75	-0.75
중앙정부	-3.3	-4.50	-1.75	-1.00	-0.75
주정부	0.3	0	0	0.25	0.25
지방자치단체	0.2	0.25	0.25	0.25	0.25
사회보장기금	0.2	0	0	-0.25	-0.50
일반정부 기초 재정수지	-1.9	-3.50	-0.75	0.25	0.50
이자지출	0.7	0.75	1.00	1.00	1.2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1.8	-3.25	-1.50	-0.75	-0.75
일반정부 부채	66.3	67.75	66.50	66.25	65.50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p.41, Table 5; p.43, Table 8; p.55, Table 13.

〈 그림 2 〉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재정적자의 기준 한도는 GDP의 3%  
 2. 중기재정목표(MTO)는 국가별로 사전에 설정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 p.15, Figure 3.

### 3 |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정책 방향

» 독일은 추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안정지향적(stability-oriented) 재정정책이 필요

- 독일의 재정정책은 위기 기간의 단기 안정화 조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경제·재정 정책, 재정의 회복력과 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함
  - (위기 상황에서의 안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높아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소득 안정 조치, 선별적, 한시적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생산 능력 보호,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처럼 위기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
  - (저성장과 고물가에 대응하는 공급 측면 정책) 정부는 자생적(self-sustaining)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총공급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달성 가능
    - ◆ 독일은 특히 기후중립 경제, 디지털화, 인구 변화와 관련된 공급 정책을 추진
    -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제공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관료주의 개선, 공공행정 디지털화, 직업교육 강화, 인프라·교육·혁신에 투자 등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
  -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재정 회복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 이후의 재정 정상화를 추진
    - ◆ 과도하게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추가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이 정상화됨에 따라 미래 대비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임
    - ◆ 정부는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효율적(efficient),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선제적(proactive) 방식의 재정정책을 추진
  - (효율적)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출을 평가
  - (미래지향적) 향후 위기, 지출 소요 증가, 금리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체계를 벗어나 가능한 빨리 정상 상태로 회복
  - (선제적) 재정정책이 주요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7) 2023년부터 독일 부채 규정에 따른 차입한도를 준수할 예정

**나**

**수입 및 지출 관련 재정정책**

» (에너지 위기 안정화 및 지원) 연방 정부는 위기 기간에 사회적 결속 유지, 불확실성 축소, 경제 생산 능력 보호 등을 위해 일시적, 선별적 지원 조치를 시행

- 에너지 비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세 차례의 종합 구호 패키지(2022년~2023년, 총 1,000억유로)를 채택하고, 경제안정화기금 재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조치에 최대 2,000억유로를 배정
  - 추가 아동수당, 납세자 에너지 비용 지원, 재생에너지 부담금 폐지, 장거리 통근자 공제 인상, 난방 보조금, 9유로 티켓, 유류세 인하, 연금기여금 전액 공제 조기 시행 등의 조치 포함
  - 연금 수급자·복지급여 수급자·학생 등에게 600억유로 이상의 한시적 지원 제공
  - 기존 실업수당 지원 제도가 대체·개선된 ‘시민수당’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
  - 에너지 가격 상한제, 가스 및 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등 시행
- 에너지 공급 보장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 대출 등을 통한 가스·전기 업체 지원
-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통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상승을 방지
- 독일 경제 규모와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를 고려 시 이러한 경제적 보호 조치의 규모는 적정하고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가능하다고 평가

» (에너지 공급) 정부는 에너지 공급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 보장 및 다양화, 인플레이션 요인 완화, 신뢰할 만한 사업 여건 조성 등 총공급 확대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지원

- 러시아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입 제한 시행으로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 완화
- 예비 전력원 석탄발전소 재가동(2024년 3월까지 한시적), 천연가스 저장 시설 재고 확보를 위한 추가 대출 지원 등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한 법령 개정
- LNG 수입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에너지 절약 유인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한 산업의 생산자와 고용을 보호

» (기후변화 대응) 기후중립적 전환 촉진 관련 민간투자 지원 및 기타 조치를 위해 2026년까지 기후전환기금에 총 1,780억유로를 배정

- 산업계의 탈탄소화 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2026년까지 100억유로), 에너지 효율적 건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2023년 169억유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지원(56억유로), 수소산업 발전 촉진(40억유로), 전력 집약적 기업 지원(30억유로) 등

» (공공 투자) 2023년 연방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에서 정부는 기후중립적이고 디지털화된 경제로 전환하도록 중기계획 기간에 540억유로 이상의 투자지출을 계획

- 일반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의 2022년에서 2026년 기간 평균 증가율은 4.25%로 예상 명목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정부의 투자 보조금도 2022년에서 2026년 기간 동안 평균 8.25% 늘어날 전망

» (고용) 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고 숙련 노동자를 활용해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

-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고려해 2022년 10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
- 시민수당 도입으로 실업자 기초소득보장 지원 개선<sup>8)</sup>,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월 소득 520~1,000유로 구간의 시민수당 산정 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 비율 인상(20→30%), 구직 교육 강화 등 추진
- 평생 교육 및 숙련 개발 장려를 위해 ‘국가 숙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직업훈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실업자 대상 직업 교육비 지원도 강화
- 노동 공급 확대 및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별적 조치를 통해 고성장 기업과 미래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
  - ‘숙련 노동 전략’ 수립, 비 EU 국가의 숙련 노동자 이민 확대를 위한 입법 등

» (교육 및 연구) 2023년 연방정부 예산의 교육 및 연구 관련 지출을 전년 대비 11.7억유로 늘어난 317.5억유로로 예상

-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촉진에 자금 지원
- 대학 재정지원은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2023년 예산에 고등교육 교수학습 개선 등 약 19억유로 배정
- 주요 연구센터에 77억유로의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자금을 통해 첨단기술, 생명과학, 기후·에너지 분야 등 연구 지원

» (가족 및 사회정책)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보육·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보육시설 확대를 지원하며 2026년부터 초등학교 종일 돌봄을 도입할 예정
  - 또한 보육 서비스 개선 관련 주정부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약 40억유로의 추가 자금을 제공

8) 예: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본 급여율 인상, 직업훈련생 소득공제 인상 등

- 생활비 상승 부담으로부터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및 취약 가구 아동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
- 강화된 주거급여제도(Wohngeld Plus)로 2023년 급여액을 두 배 수준으로 높이고 난방비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영향도 반영
- » **(의료)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2023년에 코로나19 관련 의료 부문 지원은 단계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의 재정 부담이 단기에 완화되기는 어려움**
  - 2021년부터 ‘미래를 위한 병원 지원 프로그램’에 30억유로의 자금을 제공해 응급의료에 투자하고 의료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음
  - 에너지 가격 상한제의 일환으로 병원 및 요양원을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경제안정화 기금에서 총 80억유로 지출)
  -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기금의 비보험 서비스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145억유로를 지원하며, 2022년에는 140억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해 기금을 안정화
    - 건강보험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에 한시적 건강보험 재정 안정 조치를 도입<sup>9)</sup>
- » **(안보 및 국제 협력) 협력국 개발 지원(Ertüchtigungsinitiative)과 유럽평화기금에 2023년 54억유로를 배정<sup>10)</sup>했고, 독일의 동맹 및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1,000억유로 규모의 연방군 특별기금을 창설함**
  - 2023년 외무부 소관 ODA 자금은 45억유로로 독일은 세계 2위의 공여국이 될 전망
- » **(조세) 정부는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위기 이후에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선할 계획**
  -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통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기본 공제액 인상(2023~2024), 자녀공제 인상 등 추진
  - 한시적 천연가스 VAT 인하(19→7%, 2022년 10월 ~ 2024년 3월), 식당 VAT 인하 기간 재연장(2023년 12월까지) 등 조세 경감 조치도 시행
  - 정부는 부채 규정의 순차입 한도를 준수하면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체계 개선, 관료주의 철폐 등 기업을 위한 조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 EU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지침<sup>11)</sup>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추진

9) 큰 폭의 기여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기금의 재정준비금(Finanzreserven), 일회성 추가 정부 보조 및 대출 등 사용

10) 주로 우크라이나 지원 용도

11) 2022년 12월에 EU 회원국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보장하는 시행 지침을 채택

- 조세 공정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VAT 조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전국적 전자 신고 절차 도입 등도 추진

## 다 EU의 국가별 재정정책 권고 이행

### » 연방정부의 경제·재정정책 의제와 구호·안정화 조치는 EU 국가별 권고<sup>12)</sup>에 부합

- 선별적인 일회성 보조금 및 난방비 보조, 조세 경감과 개인·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보호 등 일부 조치는 다양한 목표 집단의 수요와 피해 정도에 맞게 조정됨
- 독일은 2023년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경상지출을 조정하라는 EU 이사회의 권고를 준수하고 있음
  - 2023년에 경제안정화기금 지출을 제외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1.25%, 구조적 재정적자는 0.75%로 전망
  - 이는 안정화 조치가 계속 필요한 경우<sup>13)</sup>에만 2023년 재정기조가 확장적이라는 의미임

### » 2024년에 대한 전망도 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3월에 제시한 기준에 부합

- EU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 3% 기준 충족, GDP 대비 부채 비율 하락, 에너지 가격 관련 조치의 단계적 종료, 안정적 수준의 공공 투자 등

### » 대규모 투자와 위기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면제되었던 부채 규정의 차입 한도를 2023 예산안 및 중기계획 하에 다시 준수할 예정

12) EU 이사회 권고(2022.6.17.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3년에 한시적, 선별적 가계·기업 지원(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을 고려해 경상지출 증가는 대체로 중립적 재정기조를 따르고, 상황에 맞게 경상지출을 조정  
 -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공 투자 확대  
 - 2023년 이후 중기적으로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한 예산 정책 추진(특히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 조합(tax mix) 개선, 연금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장 등)

13) 최종 소비자 에너지 가격 하락 시 경제안정화기금으로 조달하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의 재정비용이 하락할 수 있어 전망 불확실성이 높음.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충분치 않은 경우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

## 4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 » (당면 과제) 독일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인구통계적 변화는 노년부양비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침

  - 노동의 성장기여도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2년에 0.9%에서 2027년에 0.8%로 하락할 전망
- » (장기적 관점의 정부 수입·지출) 독일 정부의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성장친화적 조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추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잠재 성장을 제고하는 효율적, 미래지향적, 선제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중장기에 특히 의료, 장기 요양, 노인 관련 지출이 GDP 대비 크게 증가하고 고용의 추세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sup>14)</sup>
-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는 정부의 수입·지출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재정정책, 연금, 보건, 장기 요양, 가족, 교육, 노동시장 정책, 생산성 제고 조치 등 다양한 정책 분야가 포함

  - (생산성 제고)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특히 공공행정 현대화)을 미래 경제 성장의 주요 기반으로 고려
    - 또한 탄소 중립, 교육·연구 등에 대한 정부투자는 기업에 우호적 여건을 제공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근로자의 잠재적 성과와 생산성 제고 외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강화 조치도 재정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노동시장) 기업의 숙련 근로자 채용·유지 지원을 위해 ‘숙련 노동 전략<sup>15)</sup>’ 수립, 고령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삭감 기준<sup>16)</sup> 폐지, 시민수당 도입을 통해 구직자 교육 강화 등
    - (연금) 일부 법정 연금의 기여율을 안정화하고자 독립기관이 운용하는 ‘세대 간 자본 기금’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기금 조성을 위해 2023년 연방예산에 총 100억유로의 대출을 포함
      - ◆ 지역 연금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 민간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도 시작

14) 다만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의 재정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음

15) 숙련 노동 전략의 우선순위는 최신 교육, 전문성 개발 및 훈련, 노동 잠재력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 업무 문화 개선, 이민 정책 현대화 등임

16)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법정 연금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 수령이 가능함. 기존에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 이전 기간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소득액 기준에 따라 연금액을 삭감함

- (건강보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조치를 도입했고, 중장기에 수입 안정화 조치와 함께 지출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개혁<sup>17)</sup>을 시행할 계획

- (노동, 가족, 교육 정책) 해외 숙련 노동자 유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교육 및 역량 개발 강화 등 추진

- 초등학생 중일 돌봄 단계적 도입, 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정부에 자금 지원, 남녀의 평등한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 예정

- 교육 형평성 제고, 직업 훈련 개선 등 추진

»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독일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정기적인 지출검토를 통해 수입·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함**

- 지출검토의 목적은 예산을 목표 및 결과 중심으로 만들어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임

- 인구 변화 관련 비용, 이자 및 채무상환 지출 등으로 가용재원 비중이 감소하므로 재정정책의 주요 전략적 분야에 맞는 일관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

- 재정 여력 창출을 위해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을 줄이고자 노력

- 보조금 평가는 근거 및 결과 중심의 조세·재정 정책을 강화하는데 기여

17) 예방 및 조기 진단, 혁신적 건강 관리 등